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우성



농협이 지난 2일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슬로건 하에 '1 중앙회-2 지주회사' 체제로 새 출발했다. 그동안 신용부문에 치중, '돈놀이'가 본업처럼 돼버린 기형적 사업구조를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 활성화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2의 도약을 시도하는 농협에 대해 희망과 기대보다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아무래도 근자에 발생한 비료가격 담합과 고이자로 농심을 울린 농협의 몰염치한 형태 때문 일 것이다.

비료담합·高利에 멎는 농심

화확비료업체들이 십수년간 가격 담합을 통해 농민들을 등친 사실이 얼마 전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의 담합은 16년간이나 지속됐고, 그동안 무려 1조6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니 농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담합의 주체인 남해화학이 농협중앙회 자회사이고 보면 그 상실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농민 조합원을 위해 조직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가 주도해 다른 업체와 짜고 농

민에게 팔 비료가격을 담합했다니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인가. 그래서 광주·전남농민회를 비롯한 전국 농민단체들은 피해액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 청구인단 모집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 2곳의 단위농협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대로

농협, 누구를 위한 信·經 분리인가

이자를 올려 20억여 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겼다고 한다. 더욱이 검찰이 전국 단위 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고, 불법수익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 앞에 농협이 애써 새 출발을 선언하고 농민을 위한다 한들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농협은 또 오랜 세월 손쉬운 신용사업을 통해 돈을 벌며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골몰하고 농산물 유통 등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구색 갖추기로 출대, 불신을 자초했다.

더구나 농협은 중앙회장이 제왕적 위치에 있고, 농민과 일선 조합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 중심의 거대권력으로 변질됐다. 주인과 머슴이 뒤바뀐 격이다.

그래서 농협개혁이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이고 관행화된 불법을 뿌리뽑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경제사업의 의지가 흐릿하다. 자본·경영·인사권 등이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판매 중심의 경제지주회사라기보다는 중앙회 산하 자회사에 불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중앙회의 유통사업도 평가를 거쳐 3년 뒤야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뻔하다.

지배구조의 문제로 여전히 농민 조합원과 일선 조합이 주인이 돼 감시·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좌우하는 체제다. 농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농민조직으로 돌아가려면 중앙회 중심의 권위적인 틀부터 깨야 한다는 외침을 외면한 결과다.

농민 위한 기구로 거듭나야

농협금융지주는 자산 240조 원 규모로 국내 4대 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지만, 농협이 그동안 경제사업을 확대하고 금융사업에 치중해왔다고 해서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전산망 장기 불통 사태나 각종 비리사건에서 보듯 농협금융의 앞길도 결코 순탄치 않다.

지금 농민은 농협에 묻고 있다. 농협이 왜 생겨났고, 과연 누구를 위한 신·경 분리인가.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고 외치지 말고, 반세기 전 농협이 탄생했을 때의 정신을 되살려 그야말로 농민 돌봄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농협법을 재개정해서라도 농민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미·한중 FTA 개방 파고, 각종 농축산물 가격 폭락, 각종 가축 질병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새 출발의 의미도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논설위원〉 wskim@kwangju.co.kr

특별기고



조계현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0분 광주 금남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종산집권을 위해 벌어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哭) 민주주의 장송'대모가 벌어졌다. 이것이 바로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전국 최초의 항거다.

그러나 이사실은 아직 대다수 국민은 물론 광주시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다.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형이고 광주의 3·15의거는 4·19혁명의 첫 봉화로, 4·19혁명의 첫 장으로 기록되어야 할 광주시민의 자존심이다.

지난 52년의 세월이 4·19혁명의 첫 봉화지인 3·15 광주지거가 정부의 행사 등에서 언급이 외면되고 역사적 의미가 탈색된 채 지역의 한 사건으로 치부됐고 그 현장 광주에는 기념될 상징물 하나 없이 시민의 기억에서 망각되어 왔다.

3·15 부정선거 항거는 광주에서 시작됐다

3·15의거와 4·19혁명은 동의(同意) 동근(同根)이지만 시간과 장소와 주동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청된다. 3·15의거하면 국민들은 마산의 3·15의거를 연상한다. 마산의 3·15 2차 의거와 4·12의거의 실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광주의 3·15의거가 전국 최초의 부정선거 규탄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마산의거가 대신할 수도 없고 가려질 수도 없다. 4·19혁명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마산의 3·15의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3·15 선거당일 부정선거를 규탄한 데모는 세 곳(광주·진주·마산)에서만 있었다. 즉 정오 12시40분 감행한 광주의 의거는 전국 최초의 항쟁이고 1천여 군중이 합세하여 규모가 제일 컸고 치열했으며 희생자도 제일 많았다. 8개 도청 소재지 중 광주에서만 감행하였다. 진주는 오후 1시경에 민주당 간부 약간 명의 데모에 그쳤고, 마산에서는 오후 3시 40분 1차와 야간의 7시반경 2차 데모가 감행되었는데 야간의 2차 데모에 경찰이 시위학생들에 발포하여 희생자가 속출했음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되었다. 3·15당일의 의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광주의 3·15의거가 가려져 온 것이다.

4·19혁명은 3·15의거를 탄압할 독재의 주구 경찰의 총기발포와 그 잔인성에 분노한 의혈학생과 시민이 분기하여 성취한 시민혁명이다. 4·19혁명을 건국정신으로 성명한 헌법의 나라에서 4·19혁명의 정신과 이념이 추상적인 구호와 선언만 되풀이 하고 있음이 4·19혁명의 현 주사다.

역사는 누가 지운다고 자위하거나 실제적 진실이 감추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평가에서 시대, 장소, 환경, 이해관계 등이 영향된다 할지라도 원형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4·19 민주혁명 50주년을 맞이하여 4·19혁명 기념사업회에서 광주 금남로공원에 세운 "4·19 민주혁명 발원지" 기념표지 석에 광주의 3·15의거가 마산의 3·15의거보다 3시간이 앞선 전국 최초의 항쟁이었다는 사실이 생략되어 불만이었는데 호남 4·19혁명 단체 총연합회에서 세미나와 연찬회를 통하여 광주 3·15의거를 재평가하고 52주년을 기념일을 기하여 3·15의거의 현장 금남로에서 "국(哭) 민주주의 장송"대모를 재현하여 광주·전남 시민과 전 국민의 기억을 환기하

은편칼럼



최희동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을 아시나요?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강정마을은 제주 울레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7코스(외돌개에서 월평포구까지의 해안올레)의 중간에 있는 400여 년 된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강정해안의 구럼비바위가 보호가치가 있으나, 없느냐는 해안의 차이이기에 논외로 하더라도 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강정마을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까? 2005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 평화를 추구하자는 염원으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놓고, 2007년에는 국가안보적 가치와 석유수송로 그리고 영토분쟁지로 떠오르는 아예도와 가깝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한 모순 때문이다.

2007년 4월 찬성하는 주민 80여 명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기지유치를 결의하였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8월 10

제주 강정, 남의 일 아니다

일 마을회장을 해임결의하고, 20일 민주적 절차 거쳐 주민 1050명 중 725명이 참석하여 94%가 반대에 찬성했다. 결국 자발적이었다는 주민의 동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때라도 정부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거꾸로 기지건설을 강행했다. 곧 효율성만 중시하고 환경보존이나 주민과의 소통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이 집 한 채를 짓더라도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현실을 정부만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가진 자의 오만일까?

양윤모라는 영화평론가는 3년째 구럼비 바위에서 생활하며 작년 4월에도 구속되어 71일간의 단식을 하고, 올해 3월 9일 또다시 구속되어 30일 넘게 옥중단식을 하며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과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가 발견이어서일까? 매튜 호이 등 외국의 많은 평화주의자와 환경활동가들과 종교인, 마을주민들이 대화를 원하며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돌아온 건 구속과 벌금뿐이다.

며칠 전 뉴스타파는 공권력의 과잉대응과 제주 강정해군기지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과 건설사는 구럼비바위를 폭파하고 공권력이라는 미

명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국민은 5·18 당시 군의 특수대가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군 수뇌부는 해적이라는 표현에 흥분하기보다는 제주에서 해군이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을 지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에 공권력이 있다면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다. 맹자는 천명사상을 통해 "왕이 천명을 거역하면 백성도 왕을 갈아치울 수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새누리, '5·18 왜곡' 이영조 공천 철회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항쟁을 각각 민중반란, 폭동이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은 이영조씨가 최근 새누리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되자 일부 5·18단체들이 공천 철회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는 5·18단체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0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민중반란'으로, '제주 4·3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으로 매도해 여론의 화살을 받은 인물이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지난 1988년 이후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법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새 출발의 의미도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항쟁을 각각 민중반란, 폭동이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은 이영조씨가 최근 새누리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되자 일부 5·18단체들이 공천 철회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는 5·18단체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0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민중반란'으로, '제주 4·3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으로 매도해 여론의 화살을 받은 인물이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지난 1988년 이후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법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새 출발의 의미도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장 교육감 부당행위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진보교육감으로 청렴을 강조해온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교과부가 총합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빼온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 거부 받았다. 이후 재단은 장 전 총장 등 2명에게 3천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들은 그 중 3천1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기금은 법인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재단 측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 원씩 총 7천800만 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썼다는 게 교과부의 지적이다. 대학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용처도 불분명하게 멋대로 사용된 셈이다.

장 교육감은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했고, 돈의 성격상 꼼꼼한 정산처리가 여의치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부당성을 확인, 수사를 의뢰한 만큼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으로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존경의 대상이며 최고의 도덕성과 덕망이 요구되는 자리다. 장 교육감은 스스로 당시 일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 전남 교육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군자표변(君子豹變) 소인혁면(小人革面)』 주역(周易)의 64괘(卦) 가운데 49번째인 혁괘(革卦)의 효사(爻辭)다. 혁(혁)을 이루는 6개의 효(爻) 중에서 맨 위 6번째 효를 풀이한 것인데, '군자는 표변이 가을에 온몸의 털을 갈듯이 기존의 제도와 법을 새롭게 바꾸지만, 소인은 역량이 부족해 오로지 얼굴빛만을 바꾸어 군자를 따른다.'라는 의미다.

바로 아래 5번째 효에는 '대인호변(大人虎變) 미점유부(未占有孚)'라는 효사가 달려 있다. 대인은 호랑이처럼 온몸의 털을 완전히 바꾸는 만큼 애써 점을 치지 않더라도 신망이 절로 드러난다는 의미다.

주역에서는 각각의 괘를 이루는 6개의 효가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위쪽으로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대인이 먼저 모습을 바꾸면 효를 이어 군자와 소인도 모습을 바꾼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혁'이 본래 짐승의 가죽이라는 점, 그

리고 짐승은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한다는 점에서 주역의 '혁'에는 무언가 크게 바뀐다는, 즉 혁명 또는 혁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혁(혁)을 대표하는 '표변'이라는 효사는 요즘 들어 '이제까지의 방식 또는 태도를 한꺼번에 바꾸어버리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의나 의리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 것이리라.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의 '털 바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의 신상문제를 같은 자잘한 것에서부터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처럼 중요한 국책사업

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표변'한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 정치인이 자신들의 변화무쌍한 표변을 '임기응변'이라는 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를 하고 있지나 않은지 되짚어 볼 일이다.

/홍행기 정치부차장 redplane@kwangju.co.kr

표변(豹變)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저사·지국)구독신청·대발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